

社 説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 더 두고 볼 수 없다”

과거 민주화 운동 핵심이었던 인사들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오는 15일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며 반미·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에만 관대한 운동권의 편협한 인식을 바로잡고 정당 정치 정상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주대환씨, 서울대 삼민주 위원장으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함운경씨, 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고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민경우씨 등이 참여했다.

‘운동권’은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민주화 이후 대부분은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학생 운동권 간부들은 이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진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영향력을 키워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전반을 장악할 정도로 권력을 극대화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30년 권력이었다. 이제는 ‘운동권 귀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장기 권력화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민주주의, 인권, 정의와 반대로 갔다는 사실이다. 이번엔 출범하는 동지회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문 정권 5년간 민주주의 파괴 행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출범부터 드루킹을 동원한 대규모 여론 조작으로 시작했다. 선거법을 강제로 바꾸는,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거도 저질렀다. 위장 탈당, 회기 조개기 등 반민주적 작전을 예사로 사용

해 입법 폭주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했다.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청년들을 압수수색하고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겼다.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도 만들었다.

민주, 인권 무시는 국내에서만 아니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을 4년 연속 외면하고, 귀순을 희망한 북한 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어 강제 북송했다. 김영정 말 한마디에 국제사회가 모두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다. 도덕성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조국·윤미향 사태로 공정과 정의를 파탄 냈다. 운동권 출신 시장·도지사들이 성범죄로 몰려났다. 역대 연봉을 받은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무더기 취업하고, 탈원전을 틈타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각종 시민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수조원대 국민 세금을 타갔다. 운동권이 장기 권력이 되면서 이제는 서로 밀어주면서 국민 세금을 빼먹는 ‘운동권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그 생태계를 확대하는 사회경제제기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화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일반 시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 평범한 시민들은 열심히 일해 기업 일으키고 세금 내며 나라와 사회에 기여했다. 그동안 운동권은 반민주, 반인권을 일삼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됐다. 이 낡은 집단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나랏빛·가계빚 불린 장본인이 ‘빛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채 위기 뇌관 제거를 해야 한다”며 ‘배드뱅크(bad bank)’를 설치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 여기에 돈을 출연하자고 했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미상환 대출을 사들여 정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으로,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사용된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채무자 빚을 탕감해준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국가 부도 정도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는 방식으로 부동산 금융 부실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책은행과 증권사·사모펀드가 출자한 4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기업 정리 펀드를 운용 중이고, 9월엔 자산관리공사와 금융지주사 등의 출연금으로 1조원 규모 펀드도 가동된다. 이 단계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배드뱅크’부터 만 들면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

동안 배드뱅크가 사후적으로 운영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배드뱅크’ 출자 외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해주고 국민 80%에게 10만~25만원의 예치금 불가 지원금,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35조원은 전액 빚이다. 민주당은 온갖 곳에 세금을 뿌리면서 5년간 국가 채무를 450조원이나 늘렸다. ‘미친 집값’과 ‘영끌 빚투’ 악순환을 만들어 가계 부채도 400조원 이상 증가시켰다. 야당이 된 후에도 매년 1조원을 퍼부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법을 일방 처리하고, ‘문재인 케어’로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매워주는 법안,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 대학생 학자금용 무이자 대출해 주는 법안 등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랏빛, 개인 빚을 천문학적으로 불린 장본인이 ‘빛내서 그 빚 정리하자’고 한다.

잇단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서울 신림역 일대 흉기 난동 사건,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들은 모두 정신 질환을 앓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이력이 있다. 대전에서 고교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도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정부는 2019년 경남 진주에서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부상케 한 안인득 사건 후 중증 정신 질환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중증 정신 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켜서라도 제때 치료를 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행 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 입원’,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행정 입원’ 등 제도를 두고 있지만 환자 인권을 중시한 나머지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 여기에 환자와 가족의 갈등 우려, 소송 우려 등으로 이 범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대안으로 의료계 등이 제안한 것이 사법입원제다. 판사가 재

판을 하듯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의료진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프랑스·독일 등이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호주 등은 준 사법기관인 ‘정신건강 심판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재심 절차를 마련하고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보조인을 두면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들이 제때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과 주변,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 강제 입원을 통해서라도 잘 치료해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인권을 더 보장하는 방법일 수 있다. 사법입원제를 도입할 경우 법원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사전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재판 건수를 줄여주어도 우선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 수난시대

태평로



이용수 논설위원

탈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뒤통자 문제나”는 식으로 대응했고 이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대(大怒)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통일부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빚어진 사고에 가깝다. 책임자로 지목된 간부만 해도 통일부에 드문 대북 원칙주의자로 분류돼 지난 정부 내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된 인사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통일부의 ‘도발’로 간주했다. 통일부가 정권 교체 1년도 훨씬 지난 지금 느닷없이 ‘적폐 부서’로 지목돼 풍파를 겪게 된 것이다.

초유의 조직개편 칼바람에 너무 가혹하다는 통일부 北 인권에 눈감았던 과거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는 찬밥 신세였다. 청와대가 북 통전부의 카운터파트로 국정원을 공개 지목하면서 통일부는 회담 지원 부서로 전락했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조명균 장관이 배석하지 못한 것이 당시 통일부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통일부는 이 사실을 하루 전 통보받고 충격에 빠졌다. ‘남북 평화쇼’의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였는데 ‘적폐 소굴’ 취급을 받으니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석유 정제품의 대북 반출이 금지됐는데도 중유 340t을 몰래 개성으로 빼돌리고, ‘김여정

하명’에 전단금지법을 만들고, ‘빠라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북의 억지를 정부 공식 문서로 만들어 외국 대사관들에 뿌리고, 탈북민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보조금과 사무감사로 인권단체들을 겁박한 게 통일부다. 두목보다 앞잡이의 악행이 더 사무치는 법이다. 북한인권보고서 소동은 그런 과거를 소환했을 뿐이다.

한때 통일부는 중앙 행정기관 서열 2위의 부총리급 부서로 통일 정책을 총괄했다. 경제부총리, 외무장관, 안기부장을 거친 거물들이 영전해 오던 부서다. 조국 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통일부를 지원하는 행시 고득점자들이 적지 않았다. 통일부가 생산한 북한 정세 보고서는 안기부 것보다 탁월하던 평가를 받았고, 북한을 바짝 긴장시키는 회담 전문가들을 여럿 길러냈다. 통일부가 본분에 충실했던 시절이다.

통일부는 헌법 3조와 4조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다. 모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근거다.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5년간 통일부는 그런 노력을 집요하게 탄압했다. 급기야는 귀순의사를 명확히 밝힌 탈북 여민을 강제 북송하는 데 가담했다. 통일부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1년을 허송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김준의 맛과 섬 [150]

고창 풍천장어구이

전북 고창에는 명태기름에서 발원하여 방동산, 벽오봉, 문수산, 구항봉, 고산, 삼태봉, 선운산, 소오산, 화수산 등을 지나 고창갯벌을 흘러드는 인천강이 있다. 이 강은 갯벌과 만나는 강 하구에서 선운도랑을 굽어쳐 흐르는 도솔계곡과 만나 곰소만으로 흘러든다. 그 덕에 곰소만에는 바지락, 동죽, 백합, 김 등이 서식하고 잘 자란다. 곰소만의 고창갯벌은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중 한 곳으로 등재된 곳이다. 고창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함께 세계자연유산 품은 도시다. 곰소만을 시베리아와 호주를 오가는 많은 도요새가 찾듯이, 인천강 하구갯벌은 태평양에서 부화한 어린 뱀장어(살뱅장어)가 수천km를 헤엄쳐 찾아온다. 살뱅장어는 인천강뿐 아니라 영산강, 동

진강, 만경강, 금강, 한강 등 큰 강으로 올라와 성어로 자란다. 이렇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자라기에 ‘풍천장이’라 불렀다.

오랫동안 고창문화원장을 지낸 이기화 선생은 풍천을 고창에 있는 도솔계곡으로 특정했다. 그는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서출동류(西出東流)하는 역출수(逆出水)의 도솔계곡 서널에서 발원하여 동쪽 끝의 일문성(一門城)을 북쪽으로 휘감아 흐르는 냇물이 풍천(風川)이다’라고 했다. 사전적인 의미로 풍천은 낮에는 해풍이 밤에는 육풍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다. 해양학에서 말하는 기수역이다. 모천회귀의 능력이 강한 뱀장어의 치어들이 찾아와 성어로 자라는 서식처이다. 하지만 강 하구에 큰 댐이 만들어지면서 강과 하



천에서 성어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 대신에 강 하구로 찾아온 어린 뱀장어를 포획해 양만장에서 1년 정도 키워서 식탁에 올린다.

고창에는 뱀장어를 양식하는 양만장이 70여 곳에 이른다. 전국에 공급하는 뱀장어의 30% 정도를 이곳 고창에서 생산하고 있다. 판소리를 채집해 정리한 고창 출신 신재효의 기록에도 용왕의 폐결핵 치료법으로 풍천장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번 말복에 장어로 기력을 회복하고 가을을 준비하자.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 시민이 만든 나라...이제 '운동권 적폐' 대청소할 마지막 기회

모든 세대 모든 직군이 피·땀·눈물 흘려 이뤄냈다 | 자기혁신 운동권의 '설거지 선언'...극좌운동권은 뒤엎을 것만



75주년 건국절을 맞아

1980년대 전후에 활동했던 주요 운동권 출신 선·후배들이 오는 8.15-건국절을 기념 반(反)대한민국 역사관 바로잡기에 나섰다. 주대환 함운경 민경우 등 전직 운동가들의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그것이다.

이들은 “젊은 시절 벌였던 잔치판을 설거지하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1948년 건국 세대가 일으키고, 박정희 대통령과 삼성 현대 LG SK 대우 포항제철 등이 발전시키고

4.19이래 자유민주공정의 효용이 가꾸어 온 대한민국 75년사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근대 국민국가(자유민주공화국)의 빛나는 성공사였다.

자유민주공화국 전북 운동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으킨 정치·경제·사회·문화 갈등은 다른 한편으로 이념적 편향과 극단화를 파생시켰다. “대한민국은 천일짜기 만든 나라, 태어난선 안 될 나라, 미일 제국주의의 식민지 종속국, 따라서 혁명적 투쟁으로 타도할 구제제”라는 것이었다.

이런 역사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 강력한 파리를 물었다. 정권을 세 번씩 잡았다. 입법부 사법부를 도구화했다. 노동운동계를 움직였다. 공교육을 장악했다. 신문방송계를 좌경화시키거나 중립화시켰다.

이 세력은 비(非)좌파가 집권할 때마다, ▲효순이 미선이사태 ▲광우병 난동 ▲탄핵 정변을 일으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거나 식물화했다. ▲세월호 참사 ▲헬로인 참사를 대통령 및 정부 탓으로 씌워, 제재를 전복하려 했다.

이 시기에도 3.9 대통령 선거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려, 온갖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군중 봉기를 획책한다. ▲후쿠시마 방류를 왜곡해서 들쭉시키고 ▲양명 고속도로 괴담을 퍼뜨리고 ▲자기들이 방송을 장악한 것은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그것을 교정하려는 인사(人)에 대해서 ‘방송장악’ 어찌고 떠든다.

그들 극좌 운동권은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대륙 권위주의에 동조하면서 중국엔 비무한 조공외교로, 중국에 저항하는 티베트인들에 대해선 ‘이미 지난 일’이라고 냉대한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도 무관심하다.

저들은, ▲김정일의 3대 세습 체제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해 서만, ▲종전선언언니 ▲평화협정언니 ▲반전(反戰)언니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대한민국만의 무장해제와 ▲한미 동맹 배기가, 평화라는 식이다. 궤변이다.

운동권의 쇄신을 “환영한다”

〈민주화운동 동지회〉에 참여한 전직 운동권 인사들은 이제 그런 날조와 거짓과 오류와 조작에 전면전을 선포하려 한다. 그들은 외친다.

“혹시 우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계관, 역사관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화운동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우리의 최근 행동?”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을 주사파가 사취(竊取)하는 세상” 그러면서 이들은 “용융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밝은 생활로 나오라”고 동료들에게 권유한다.

운동권에 주눅들 이유 하나도 없다

민주화운동의 초심은 원래 자유·민주·공화·개방·공정이었다.

이거치는 조선왕조 말기-일제 천황제, 그리고 이것을 이은 북한 세습 전체(專制)였다. 그것은 한반도에선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었다.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키워낸 것은, 남로당·북로당·주사파를 제외하곤 이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직군(職群)의 피와 땀과 눈물이었다. 특정 운동권 전유물이 아니다.

건국 75주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운동은 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멋진 설거지자를 하길 바란다.

자유민주 시민들이, 극좌 운동권의 터무니없는 도덕적 우월감에 주눅들 이류란 단 하나도 없다. 오늘의 선진 한국은 모두가 함께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취다.

다 함께 손에 손잡고 한반도에 남은 마지막 잔치 적폐를 대청소 하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더 친란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전 조선일보 주필

이재명 아니면 안 되나? 왜 하필 이재명? 이재명이 뭐길래? QR code and text for an editorial by Lee Jun-il.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8월 8일 게재 되었습니다.